

오피니언

다산포럼

정지창



스크린 퀴터가 반으로 축소되는 7월 1일을 기해 영화인들이 발표한 성명서를 읽다가 '수시로 좌회전 깜박이를 넣고도 우회전하는 상습적 교통법규 위반자'라는 구절을 보고 쓸쓸한 미소를 머금게 된다.

이러한 과잉과 전락적 유연성 수용,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촛불살인의 비판이라는 느낌이 와 닿았기 때문이다.

이 성명서는 또 "자신감 주입"과 "쇼크 요법" 두 가지로 환자를 잡는 무면허 의료 시술"을 저질렀다고 노대통령을 고발하고 있다. 역시 '선 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실감되는 요즘 세태에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 같다.

'선 무당이 사람잡는다'

노무현 정부의 출범을 지지했던 나로서

는 최근의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를 당한 것이 안타깝고 안쓰럽기만 하다.

그러나 앞에서 열거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스크린 퀴터 축소, 천선산 관동 터널,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하는 대통령

새만금 사업, 쌀 현상,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이르기까지 나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주변 사람은 물론이고 나 자신에게도 '비판적 지지'의 근거를 제시하기가 난감해진 것이 사실이다.

말로는 요란하게 진보와 자주와 개혁을 표방했고, 그래서 보수 신문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던 참여정부가 가장 친미 보수적인 정책으로 우회전할 때마다 나 같은 지지자들은 할 말을 잃고 좌절감

과 허무주의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진보와 개혁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젊음과 순정을 바친 운동가들이 사기꾼으로 매도되는 것이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게다가 역사의 진보를 혐오하고 부정하는 일반 대중의 정서는 각종 선거의 야당 압승과 여론조사의 수치로 나타나 개혁의 의지를 꺾어놓기 일쑤였다.

그렇다고 시계 바늘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수구보수적인 세력을 지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10대 청소년에서 50대 장년에 이르기까지 군사 독재 치하에서 말 한마디 제재로 못하고 눈치 보며 움츠러 지낸 세월을 되돌아보면,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도 끔찍한 악몽이다.

만기제대 후 다시 영장을 받는 꿈을 꾸거나, 재수생이 다시 입학시험을 보는 꿈을 다시 꾸고 싶지는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지금 대중의 정서로는 말로만

진보·자주적이고 실제로는 보수적인 정부보다는 말로는 보수적이고 친미적인 척 하면서 실제 정책상으로는 좀 진보적이고 자주적인 정부가 더 믿음직하게 보일 것이다.

지금 대중의 정서는...

좌회전 깜박이를 넣고 우회전하는 차보다는 우회전 깜박이를 넣고 직진하는 차가 덜 혼란스럽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적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비상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신호등이 되고 뒤고 무시하면서 앞으로만 질주하는 폭주 자동차의 효율성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깜박이를 켜고 머뭇거리기는 차는 답답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느끼는 지도 모른다.

어쨌든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성명서도 정치인이나 언론인들보다는 영화인들이 더 세련되고 멋지게 써내는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세상이 그만큼 달라지고 진보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영남대 독문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두려워 해야할진 레임덕이 아니라 민심이다

노대통령이 또 특유의 막무가내 인사를 했다. 여당의원들마저 기용을 반대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육부총리에 앉힌 것을 비롯, 청와대 참모들을 핵심요직에 배치하는 개각을 한 것이다. 반대여론이 커질까봐 '속전속결'로 해치웠다'는 뒷말도 나온다.

우리는 5·31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국민의 심판을 들어 적어도 교육부장만큼은 정권의 코드와 무관한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야당들이 한결같이 비판하는 대로 대통령은 '민심과 괴리된 코드 인사, 두려막기식 인사'를 강행했다. 민노당 마저도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책임보다 친정 체제 구축의 계기로 삼으려는 전형적인 임기 말 정권 후회형 개각"이라고 비난하는 지경이다.

전교조와 교직원 모두 김씨의 교육부총리 임명에 반대하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김씨는 무능대학 퇴출 등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외치는 인물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교육기조는 앞의 김진표 부총리의 사례에서 보듯 철저한 평등주의를 견지해 왔다. 전교조도 교육부총리에 앉힌 것을 비롯, 청와대 참모들을 핵심요직에 배치하는 개각을 한 것이다. 반대여론이 커질까봐 '속전속결'로 해치웠다'는 뒷말도 나온다.

김병준씨에 대한 내외의 거부감을 모를리 없는 대통령이 이처럼 무리수를 던진 임기 막바지 권력수습현상을 틀어막아 보자는 의도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나름대로 역사적 소명의식 같은 걸 갖고 있는 노대통령으로서 민심에 연연하기보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의지를 받들 친위조직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몹시 위험하다.

레임덕을 막아주는 것은 무리한 친위 인사가 아니라 국민의 지지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치는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다. 국민을 우중(愚衆)으로 보는 대통령의 독선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이다.

정책실패 깎고 개혁피로 더한 로스쿨 연기

정치권의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대립으로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로스쿨을 준비해 왔던 대학과 수험생들의 혼란이 극심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를 추진해 2009년에는 반드시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이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다.

로스쿨 도입이 1년 이상 미뤄짐에 따라 전년대와 조년대 등 유치전장에 뛰어들었던 전국 대학들이 적잖은 재정부담을 떠안게 됐다. 로스쿨 유치를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조실무 경력이 있는 전임교수 확보와 법률전문 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신설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정부 방침만 믿고 이미 채용했던 교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전용시설 건립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민생을 외면한 여야간 대립으로 대학들이 얹어서 수습이원

을 날리게 된 셈이다. 대학 뿐 아니라 2008년 개교에 대비해 입학 준비해 왔던 수험생들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취업이 쉽지 않은 판국에 최소 1년 이상을 더 기다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준비 기간 부족을 이유로 로스쿨 유치가 소극적이었던 여타 대학들마저 유치전에 가세할 경우 경쟁이 더욱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법안 통과가 장기간 표류할 경우 로스쿨 도입의 당위성에서부터 적정 입학 정원을 둘러싼 법조계의 해묵은 논쟁이 재연될 소지가 높다. 그러나 로스쿨 도입은 이미 확정된 국가정책이자 사법개혁의 핵심사안이다. 국가정책이 오락가락해서는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리 만무하다. 더욱이 로스쿨은 사법개혁의 핵심 사안인 만큼, 정치권이 중차대한 국가정책의 발목을 잡으면서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될 수밖에 없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박형철. 수도권 집단식중독이 발생한 지 10여일이 지났다. 그동안 매체나 이해 관계인들의 온갖 추측과 제언들로 넘쳐난 시기였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 결과 발표도 있었다. 계류 중이었던 학교급식법을 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수 일 만에 통과시켰다. 정치권은 한숨 돌린 듯 하고 다시 일상 정치로 돌아갈 태세다. 2천여명이 가까이 보고 된 이번 사태가 수습국면에 접어들 듯 하다. 법 통과 후에도 아직 일말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지금까지 격양된 감정으로 사안을 냉정하게 보지 못한 측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제 다시 준비

아름다운 퓨마. 북아메리카 울창한 토키산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킬러(killer)가 바로 퓨마다. 남아메리카로 영역을 넓혀보고 싶지만 부담스럽다. 재규어가 버티고 있는 탓에 영역확장을 하기 힘들다. 미국에서는 퓨마라는 말보다 쿠거(cougar)라는 게 더 일반적이다. 스포츠 용품 회사 퓨마의 광고 그림을 보면 마치 퓨마를 치타와 착각할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주력 이미지가 강조돼 있다. 하지만 퓨마는 민첩성·주력·호전성 등 모든 면에서 표범보다 훨씬 떨어진다. 주요 표적으로 삼는 대상도 쥐나 새 같은 작은 먹이다. 물론 가끔 사슴을 잡기도 한다. 퓨마의 걸 모습은 화려하고 잘 생겼다. 털은 부드럽고 두텁고, 머리와 몸은 8등신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흙 잡을 데 없는 매우 아름다운 몸을 가졌다. 성격도 비슷할까.

이제 다시 준비해야 한다. 해야 한다. 먼저 전염병 감시체계를 구축 또는 정비해야 한다. 최근 들어 전국수준의 전염병감시체계는 많이 보강되었어도 아직 시도단위의 감시체계는 평이하거나 미약한 수준이다. 뒤늦게 식중독 환자가 추가로 나타난 것은 적절한 지역단위 감시체계가 작동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국지적 호우는 그 지역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전염병이나 식중독의 경우 반드시 그렇지 만은 않다. 경사면이 급하고 긴 눈 쌓인 언덕에서 주먹만한 눈덩이를 굴리면 나중엔 집채만큼 불어나는 '눈덩이 효과'가 저울 수 있다. 인적 교류와 교통이 발달한 오늘날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초기 발생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확산을 막고 2,3차 발병자를 최소화하는 데는 이 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건위생관련 조직도 살펴보고야 한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해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측은해 보일 정도다. 현재 이들은 번식이 잘 안 되어 멸종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종목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사무실 '불청객' 잡상인 영업행위 규제 필요하다. 인기척도 없이 불쑥 사무실에 들어와 "A 카드 가지고 계세요, 하나 만드시죠?"라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던 업무가 끊기는 것은 당연하다. 아예 "나가 주십시오"라고 해도 끈질기게 가입을 권유하며 업무를 방해한다. 업무 전화를 하고 있는 옆에서 기다리고 있을 정도다. 물론 카드 회사 직원들에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각종 물품을 판매하려 오는 상인

독자마당. 수수료 인상 급급 은행들, 고객 서비스 개선은 뒷전. 은행업무 마감시간은 오후 4시30분으로, 이 시간 이후에 돈을 찾는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 자동 입·출금기로 현금을 찾을 때는 1회당 7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100만원을 찾으려면 2회에 걸쳐 인출해야 하고 연속거래임에도 수수료를 2회 모두 부과하고 있다. 인출금 상한제로 결국 은행만 이익을 챙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최근 은행들이 서비스 확대나 고객 편의를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고 수수료만 늘려 받아 작년에 수수료 수입이 사상 최대라는

無等鼓. 헬리콥터 벤. 벤 버뱅크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말 한마디에 글로벌 증시가 춤을 추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주 0.25% 금리인상을 단행한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도 세계 증시는 윙윙 울려퍼졌다.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은 흥분 흥분 그의 '입'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런 그가 최근 미국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의견이다. 신뢰 추락에 소린 '인플레이션 목표' 실행을 모색토록 하는 파급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은 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그를 노골적으로 불평한 것과 때를 같이해 관심을 이끈다. 그는 전임자 앨런 그린스판과 달리 '너무 솔직한 발언'들을 토해내 헬리콥터처럼 시끄럽다는 비아냥으로 '헬리콥터 벤'이 된 것이다. 암참의 마틴 레갈리아 수석애널리스트는 버뱅크에 대해 "하루는 이런 소리를 했다다가 그 다음주에는 다른 말을 한다"면서 시장 혼란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FRB가 너무의 장에게 치중돼 있다'고 비판한 점을 상기시켰다. 아무튼 그는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린스판을 그리워 하는 여론의 공세 속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다. 그도 이런 여론을 의식했는지 FRB 커뮤니케이션 패넬을 구성, FRB와 시장간 원활한 의사소통 모색에 최근 나섰다. 성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명쾌한 판단과 신중한 발언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printing details.